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1994. 5.

余仁坤

(國際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本 資料는 統一政策 立案의 參考資料로 作成한 것으로서
모든 內容은 論文作成者의 個人的인 意見이며 當 研究院의
公式的인 見解가 아님을 밝힙니다.

- 目 次 -

I. 1994년 6월 모스크바 頂上會談	1
1. 開催 背景	1
2. 兩國의 基本立場	3
II. 韓·러間 主要懸案	5
1. 北韓 核問題	5
2. 經濟協力問題	7
3. 脫北 伐木工問題	10
4. 其他 問題	13
III. 韓·러關係 定立方案	15
1. 基本方向	16
2. 頂上會談 對處方案	18

I. 1994년 6월 모스크바 頂上會談

- 김영삼 대통령은 1994년 6월 1~7일 모스크바와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쉬켄트 및 블라디보스톡을 순방할 예정으로 있음. 특히 모스크바에서는 엘친 러시아대통령과의 정상회담(6.1~4)이 개최될 예정으로 있는 바, 동 정상회담의 개최배경과 이에 대한 한·러 양국의 기본입장은 다음과 같음.

1. 開催背景

- 1991년 말 구소련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한·러관계는 소련과 수립된 국교(1990. 9)를 기초로 지난 2년여 동안 정치·경제·군사·과학기술 등 제반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음. 특히 1992년 11월 18~20일간 엘친 대통령의 방한은 양국관계를 국교정상화 단계로부터 한 次元 더 높은 '성숙한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 그러나 한·러관계를 포함한 동북아 역내국가간의 정치·경제적 상호 의존 심화에도 불구하고 역내 국제질서는 냉전의 잔재가 아직 완전히 청산되지 못하고 過渡期的인 불안정 국면이 지속되고 있음.
 - 미국이 역내 지도력을 견지하려 하고 있으며 일본은 자국의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역할 증대를 모색하고 있음. 중·러도 각각 역내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편, 미국의 일방적인 이익확보나 일본의 군사적 역할증대를 견제하려고 하고 있음.

- 한반도에서는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긴장 속에서 남북한간의 적대감과 불신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한반도 주변 4강과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하여 多角的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금번 모스크바 한·러 정상회담 개최는 상기와 같은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하에서 국제화를 추구하는 한국과 친서방 외교기조를 유지하면서 강대국의 위상회복을 모색하고 있는 신생 러시아의 이해가 일치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정치면에서, 양국은 「한·러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1992. 11 체결)을 기초로 당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들을 해결함으로써 善隣友好關係를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키려는데 이해를 같이하고 있음.
- 안보면에서, 양국은 국제사회의 최대 현안인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함으로써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 핵의 수평적 확산을 방지하고, 「동북아 다자간안보협력체」 형성을 통해 역내평화를 정착시키려 하고 있음.
- 경제면에서, 러시아는 경제난 극복과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개발 차원에서 또한 한국은 수출시장 다변화와 천연자원 확보 및 첨단 과학기술 습득 차원에서 상호간의 經協擴大에 이해를 갖고 있음.

2. 兩國의 基本立場

- 금번 모스크바 정상회담에 대한 한국의 기본입장은 그동안 문민정부가 추진해온 균형된 4강외교를 마무리 짓고 한반도 및 동북아정세 논의를 통해평화정착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러시아와의 제반관계 확대·발전으로 21세기를 대비한 유리한 통일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임.
 - 한반도에서는 주변 4강의 전략적, 경제적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바,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에 이은 금번의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4강과의 미래 指向的인 선린우호관계를 공고히 함.
 -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둘러싸고 야기되고 있는 현재의 한반도 위기를 해소하고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러시아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는 한편, 핵문제 해결을 위한 4강의 협조체제를 확립함.
 - 양국간 현안 해결을 위한 실무협상기반 조성, 경협 확대, 군사협력 강화, 과학기술협력 증진 등에 관한 협의를 통하여 미·일·중과 함께 한반도 統一過程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되는 러시아로부터 평화통일을 위한 지지와 협력을 확보
함.

- 반면, 러시아는 域內에서 유리한 안보환경 조성, 역내국가들과의 경협강화, 아·태국가로서의 위상 확립 등을 동북아정책 기조로 삼고 있는 바, 금번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측됨.
 - 동북아정세의 불안정이 야기되는 경우 자국의 개혁 뿐만 아니라 한·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식, 북한 핵문제의 양자간 및 다자간 협의를 통한 평화적 해결, 동북아 질서재편에 대비하기 위한 한·러간 군사협력 강화 및 「다자간 안보협력체」 형성을 위한 논의의 활성화 등을 주장할 것으로 展望됨.
 - 러시아는 현재 일본이 북방영토문제로 인하여 대러 「정경불가분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경협 확대에 큰 比重을 두고 있는 바, 한국의 자본과 기술 유치, 개발경험의 습득, 무역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할 것임.
 - 최근 러시아는 국제무대에서 위상 강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한반도를 적극적인 外交努力을 기울여야 할 세계의 또 한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음. 따라서 대한국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 실익을 꾀하고 동북아 및 한반도에 대한 영향

력을 확대하려 할 것임.

II. 韓·러間 主要懸案

- 한·러간의 주요현안은 북한 핵문제, 경협문제, 시베리아의 탈북
별목공문제 등으로서 특히 금번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는 북
한 핵문제가 集中的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됨.

1. 北韓 核問題

- 북한은 현재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에 직면하여 김일성-김정일
체제 강화, 미·일로부터 경제지원 유도 및 대미·대일 수교 등
을 목적으로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국
제사회는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
음.
- 북한은 1994년 5월 12일 IAEA의 추가사찰을 수용하는 한편,
'안전상 불가피한 조치'라는 구실하에 연료봉 교체에 착수하
는 2重戰術을 구사하고 있는 바, 북한 핵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고 있음.
 - IAEA의 전면적 사찰과 남북한 상호핵사찰을 통해 북한 핵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입장을 견지해온 한·미 양국은 IAEA
추가사찰단의 결과 보고에 따라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의

개최 또는 유엔안보리에 의한 대북한 제재 與否를 결정할 예정으로 있음.

○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자국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북한에게 전면적 국제사찰의 수용, NPT 체제로의 완전 복귀 등을 촉구하면서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동의하였음.

○ 그러나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양자간 협상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경제제재를 논의하는 경우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든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¹⁾

- 이는 동북아정세의 불안정이 개혁을 추진중인 러시아에 미칠 부정적인 影響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됨.

○ 이러한 배경에서 러시아는 북한이 전면적 국제사찰을 수락하도록 설득하는 한편, 양자간 회담이 가시적 결과를 산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8者會談」²⁾을 제의하고 있음.

- 그동안 북한 핵문제에 소외되어 온 러시아가 이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분석됨.

1) 쿠나제 신임 駐韓 러시아大使의 1993. 12. 17 모스크바 주재 한국특파원들과의 기자회견 내용. 「朝鮮日報」, 1993. 12. 18.

2) 러시아는 지난 3월 24일 유엔 안보리의 對北韓 결의안 초안 검토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북한 핵問題의 외교적 해결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한·미·중·일·러·유엔·IAEA가 참여하는 「8자회담」을 提議한 바 있음.

- 그러나 러시아가 제안하고 있는 「8자회담」은 가까운 시일내에 개최될 가능성이 적음.
 - 한·미 양국은 북한 핵문제가 기본적으로 「북·미회담, 북·IAEA 회담, 남북대화」라는 3개 채널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바, 동 회담 개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북한은 동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연구·검토하겠다는 입장(1994. 5 북·러 외무차관회담)을 취하고 있으나 북한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북·미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간주하고 있음. 또한 북한은 관련국이 대부분 '친미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발언권 弱化를 우려하고 있음.
 - 러시아도 또한 남북한과 주변 4강이 제각기 한반도에서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동 회담의 약점임을 인정하고 있음.

2. 經濟協力問題

- 경제난 극복과 경제발전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러시아는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습득과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 對韓 무역구조의 조정 등과 관련, 한국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음.

- 러시아는 한국이 2000년 경에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GNP 6억 8천만 달러, 1인당 GNP 1만 5천 달러)하고 있음.
 - 러시아는 현재 한국상품의 수출시장 및 천연자원의 수입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바, 이러한 무역구조를 보다 有利하게 조정하려 하고 있음.
- 한·러간 경협에서 가장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분야는 무역으로서 1993년 양국간 무역액(15억 7천 6백만 달러)은 1992년(약 6억 8천 8백만 달러) 대비 2.3배 증가되었음.
- 그러나 1993년도 한국의 대러 수출(6억 1백만 달러)이 2배 증가한 반면, 수입(9억 7천 5백만 달러)이 2.5배 증가하여, 한국은 대러 무역에서 약 3억 7천 4백만 달러의 貿易赤字를 기록, 무역적자 폭이 증대(1992년 약 1억 4백만 달러)하고 있음.
- 러시아의 對韓 經協에서 최대 관심사항은 투자분야로서 한국의 대러 투자는 아직까지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으나, 투자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투자분야도 다양화되고 있음.
- 한국의 「독립국가연합」(CIS)에 대한 투자는 러시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1993년 상반기 현재 22건, 3천 270만 달러에 이르고 있음.

- 그러나 평균 50~60만 달러의 소규모 투자, 50%의 한국지분 자본, 러시아 정국불안과 법체제 불안정으로 인한 한국기업들의 투자 자제 등이 문제점으로浮刻되고 있음.
- 한편, 舊蘇借款 問題는 한·러간 경협외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한·소 양국은 수교 직후인 1991. 1 한국이 구소련에 1991~1993년 기간중 30억 달러³⁾의 경협자금을 제공키로 합의하였으나, 소비재차관 잔여분과 자본재차관 미집행분 총 15억 3천만달러는 기집행된 원리금 및 이자에 대한 러시아의 상환지체로 집행이 중단되고 있음.
 - 한국은 원리금과 이자의 전액상환을 러시아측에 요구한 반면, 러시아는 「파리클럽」會員國들의 경우와 같이 채무상환기일연장과 이자의 현물상환을 희망하고 있음.
 - 동 문제가 양국간 의견차로 장기화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서 한국정부는 경협차관 상환문제를 對러 경협 및 김영삼 대통령의 訪러와는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또한 한국정부는 미수금중 일부를 원자재나 군수품 등 현물로 받고 잔여분을 상환유예하는 방식으로 일괄해결한다는 방침하에 양국간 實務協議를 계속할 예정임.
- 향후 한·러 경협관계는 다음과 같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3) 현금차관 10억 달러, 소비재차관 15억 달러, 자본재차관 5억 달러.

- 러시아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는 1996년부터 특별관세 적용을 중지하고 일반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바, 50% 관세감면 혜택 중지에 따라 한국의 對러 輸出이 타격을 입게 될 것임.
- 러시아 연해주 나홋카 자유경제지역에 1백만평 한국기업 전용공단을 설치하기 위한 양국간 기본합의서가 제1차 「한·러 경제공동위원회」에서 교환될 예정으로 있는 바, 향후 한국의 대러 투자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경협차관 상환문제는 양국 입장의 절충선인 일부 상환유예, 일부 현물상환 방식으로 妥結될 가능성이 높음.

3. 脫北 伐木工問題

- 「소련방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간 러시아 영토내에서의 벌목 및 목재종합가공 협정」(林業協定)⁴⁾에 의거 1967년 이후 약 1만 5천~2만 5천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하바로프스크, 아무르 등 17개 시베리아 벌목장에서 목재벌채 작업에 종사하고 있음.

4) 러·북 양국은 1993년 말로 滿了된 임업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교섭을 진행중이나 러시아측이 북한 벌목공들에 대한 국제인권 기준과 러시아 국내법 규정의 엄격한 적용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둘러싸고 양국간 심각한 異見이 노출되고 있음.

- 북한당국은 그동안 열악한 노동조건과 혹독한 생활환경에 있는 노동자들의 탈주 방지와 탈주기도자에 대한 재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사설감옥소를 설치, 노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하여 왔음.
 - 1990년대 초부터 열악한 환경으로부터의 탈피와 외화벌이 등의 목적으로 별목장을 탈출한 북한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바, 약 90명의 탈북 별목공들이 한국 귀순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⁵⁾.
 - 1994년 5월 현재 한국에 귀순·정착한 시베리아 탈북 별목공은 20명임.

-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한국으로의 귀순 희망자를 모두 수용한다는 방침하에 러시아가 탈북 별목공들을 북한에 송환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한편, 이들의 정착 희망지를 확인하고 북한의 납치 주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유엔難民 高等辦務官 (UNHCR: UN High Commissioner of Refugees)을 개입시켜 국제난민 지위를 부여한 이후 러시아나 한국 또는 제3국에 정착 시킨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이들의 법적문제와 안전 및 정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실무위원회 가 구성(94. 5)되었음.

5) 反面, 쿠나제 駐韓 러시아大使는 “현재까지 한국으로 가겠다고거나 러시아에 남아 거주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면서 러시아정부에 신청한 사례는 하나도 없다”고 언급함. 『世界日報』, 1994. 5. 14.

- 러시아는 1994년 5월 초까지 “범법자가 아닌 한 러시아 국내법 적용⁶⁾과 인도적 차원에서 희망하는 자들의 한국 귀환을 許容 하겠다”는 한국정부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음.⁷⁾
 - 또한 러시아는 난민지위 부여문제가 고려될 수 있으나 양자 간 협력으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그러나 러시아 외무부는 최근 한국정부에 강경한 입장을 전달⁸⁾하는 동시에 별목공 처리에 있어서 중립적인 태도⁹⁾로 旋回하고 있는 바, 러시아정부의 이러한 입장 변화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북한이 러시아정부에 대해 한국정부의 탈북 별목공 귀순 추진을 강력히 항의하고 있음.
 - 러시아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부처간 意見相異¹⁰⁾ 때문에

6) 러시아 거주 외국인은 러시아법의 保護下에 있기 때문에 국내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第3國으로 갈 권리와 정치망명 신청권을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인으로서 犯罪를 행한 경우, 러시아 국내법에 따라 재판받고 司法共助協定의 범죄인 인도 조항에 의거 북한당국에 引導되거나 또는 러시아에서 복역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7) 1994. 4. 8 파노프 외무차관 발언과 4. 14 한·러 외무장관 회담.

8) 러시아는 “한국이 탈북 별목공의 귀순문제를 政治的으로 이용하려 하거나 현재와 같은 言論報道로 과열 분위기가 지속될 경우 러시아정부의 기본 입장을 전면 재고할 수도 있다”는 立場을 한국정부에 傳達(5. 11)하였음.

9) 모이세예프 러시아外務部 한반도 담당관은 “탈북 별목공들이 남한 또는 북한 어느쪽으로 가려 하든지간에 이들의 希望에 대해 방해하거나 협력 하지도 않을 方針”이라고 밝혔음(5. 12).

10) 러시아정부내 意見相異는 개혁지향적인 외무부와 원칙준수를 主張하는

최종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언론들의 별목공 관련기사로 인하여 러시아정부의 對內外的 입장이 극히 난처하게 되었음.

- 러시아정부는 김영삼 대통령의 訪러가 임박해 옴에 따라 한국정부가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탈북 별목공문제의 협상카드로서의 이용가치가 더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 때문에 탈북 별목공 문제가 조기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진척되지 않고 있는 바, 동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절차가 복잡한 UNHCR 介入方式보다는 양자간 협상에 의해 직접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4 其他 問題

가. 舊러시아 公館敷地 問題

- 한·소수교 이후 근 4년간 끌어온 舊러시아 公館敷地 문제가 양국간 실무협상을 통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있는 바, 양국은 서울(舊 培材高 敷地)과 모스크바에 약 1 ha.(2,400평 정도) 규모의 대사관 부지를 상호제공하고 한국은 추가로 구러시아 공

내무부 및 보안기관 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관의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1천 2백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합의 하였음.

- 러시아 일간 「네자비시마야 가제타」紙는 “동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러 관계가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1994. 5. 13)함으로써 김영삼 대통령의 방러 기간중이나 그 이전의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 경제기획원은 토지수용 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배정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바, 한국정부는 러시아에 의해 계속 연체되고 있는 경협차관 이자(1994. 4 현재 1억 2천 970만 달러)와의 相計 등의 방법을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임.

나. 對北韓 잠수함 販賣問題

- 러시아는 경제난에 직면하여 외화 획득을 위해 중국 등 제3세계에 군사무기 판매를 확대하고 있는 바, 일본 무역회사 중개로 퇴역잠수함 12척을 ‘고철용’으로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북한과 체결(1993. 11)하였으며 현재까지 1척이 북한에 인도되어 있는 상태임.
- 러시아는 현재 ‘고철용’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장 확인에 관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부품조달, 잠수함 기술 향상 등의 군

사적 목적으로 재활용할 可能性을 배제할 수 없음.

- 역내국가들이 이를 우려하고 있는 바, 한국정부는 잠수함 해체작업의 감시를 위해 관계전문가를 북한에 파견하도록 러시아정부에 요청해야 할 것임.

다. KAL機 事件問題

- 1983년 KAL機 사건과 관련, 러시아정부는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를 해왔으며 러시아측에 더 이상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1994. 2. 8 쿠나제 주한 러대사)는 무책임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 「로시이스카야 가제타」지는 당시 극비문서를 입수하고 “구소련이 당일(1983. 9. 1) 2차례에 걸쳐 정치국회의를 소집했으며 이 회의에서 사건진상 규명보다는 그들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기사를 보도(1993. 11. 11)하였는 바, 러시아는 구소련과 마찬가지로 KAL機 사건의 진상규명에 아직까지 消極的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III. 韓·러關係 定立方案

- 한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유리한 통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러관계의 기본방향을 정

립하는 한편, 상기와 같은 한·러 양국간의懸案들을 고려하여
금번 모스크바 정상회담에 대처하여야 할 것임.

1. 基本方向

- 1990년대 후반기에 러시아는 대내적으로 경제난 극복과 정국안정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동북아에서 세력균형 유지 및 강대국으로서의 위상회복에 외교정책의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 국내정국이 강력한 대통령제 헌법의 채택(1993. 12)과 「시민협정」의 서명 등으로 1993년에 비해 안정국면에 들어섰는 바¹¹⁾, 경제가 점차 好轉될 경우 엘친 대통령이 1996년에 재집권할 가능성이 있으나¹²⁾ 반대의 경우 대선을 앞두고 보·혁간 권력투쟁의 재현이 예상됨.
 - 러시아는 국내개혁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한반도에서의 돌발사태로 야기될 수 있는 동북아 세력균형의 급격한 변화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한국에 편향된 南北韓 等距離外交라는 현재의 대한반도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

11) 대내적으로 엘친 대통령과 극우민족주의자 지리노프스키 등 反엘친 정치지도자들은 정국안정을 위하여 次期 大選과 總選이 실시되는 1996까지 향후 2년간 모든 정쟁의 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화합을 위한 시민협정」에 署名(1994. 4. 28) 하였음.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29, 1994.

12) 1931年生인 엘친 대통령은 1993년 헌법개정시 대통령의 65세 年齡制限 규정을 폐기한 바 있으며, 현재 再選을 위한 친위정당 창설을 구상중임.

으로 판단됨.

- 그러나 러시아내 다수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2005년 경이나 그 이후에 한반도통일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바¹³⁾, 러시아정부는 이에 대비하는 중장기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러시아는 단기적으로 선린우호관계를 확대하고 경제·군사협력을 강화하며 한반도 비핵화 등을 실현하기 위한 對韓國政策을 수행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한간의 군축과 군비통제를 유도하고 한반도통일 문제가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은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향후 對러關係를 정립해야 할 것임.

- 정치면에서, 한·러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라는 공동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바, 엘친 대통령의 지속적인 개혁추진을 기본적으로 지지해야 할 것임. 1996년 엘친 대통령이 재집권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大選出馬 의사를 밝힌 개혁파 가이다르 「러시아선택당」 당수와 야블린스키 의원, 중도파 스코코프 전 안보회의 서기 등과 유대관계를 설정해야 할 것임.

13) 余仁坤,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民族統一研究院 研究報告書 93-28, 1993. 12), pp. 60~62.

- 안보·군사면에서, 북한핵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와 공동보조를 취해야 할 것이나 한반도통일이 한·미·일 協助體制를 기초로 달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러시아와의 군사동맹 관계는 피해야 할 것임.
- 경제면에서, 한국은 對러 경협 확대를 통해 러시아의 경제난 극복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것임. 또한 러시아의 풍부한 자원과 경제 潛在力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에 참여하고 투자하되 미·일과의 다자간 공동참여 방식이 바람직하며, 단기적으로는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소규모 프로젝트에 주력해야 할 것임.
- 한반도문제와 관련,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를 계속 확보하고 러시아로 하여금 북한의 改革과 開放을 촉구하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남북한 교차승인의 완결시 러시아는 대북한 영향력 유지 및 확대 차원에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경우 한국은 안보와 대러 경협문제를 연계시킬 필요가 있음.

2. 頂上會談 對處方案

- 한국은 對러 關係 정립을 위하여 금번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현안들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해야 할

것임.

- 「朝·露通商條約」(1884) 체결 110주년을 맞아 21세기를 향한 同伴者關係 확립을 위하여 러시아측이 한국전쟁 관련 비밀문서¹⁴⁾들을 인도하는 한편, KAL기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 규명과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 등을 통해 냉전시대의 過去史를 정리토록 함.
- 북한 핵문제와 관련, 러시아의 국제적 공조체제 동참을 촉구 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저지를 위해 러시아가 강경하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함.
- 한·러 양국의 국력을 강화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경제·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함. 그러나 경협차관 상환 문제와 관련, 양국 제안의 절충방식인 새로운 韓國案(일부 상환유예, 일부 현물상환)의 受容을 러시아측에 촉구해야 할 것임.
- 절차가 복잡한 UNHCR 개입보다는 양국간 직접 협의에 의해 탈북 별목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구러시아 공관부지 보상금과 경협차관 이자와의 상계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북한의 러시아 잠수함 해체작업에 대한 러시아 관계전문가의 現場立會와 동해에 대한 핵 폐기물의 투기 자제를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임.

14) 러시아정부는 1993년 6월 한승주 外務長官의 모스크바 방문 당시 한국전쟁 관련 비밀문서 目錄을 전달하고 한·러 정상회담시 문서를 한국정부에 인도하기로 약속한 바 있음.

- 이외에도, 한국은 금번 정상회담을 양국의 개혁주도 대통령간의 親分關係를 더욱 심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양국간 문화·예술·스포츠 교류확대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양국민의 상호이해를 증진시켜야 할 것임.

- 우즈베키스탄과 블라디보스톡에서는 한국과 現地 韓人들과의 민족적 유대감을 너무 강하게 表現함으로써 타 민족들의 불만이 야기되지 않도록해야할 것임. 또한 현지 한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21세기를 앞두고 국가간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浮刻시킬 필요가 있음.

● 發刊資料目錄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北韓의 權力構造와 金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 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的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 1990년대 東北亞秩序 豫測(III) -
- 93-07 東北亞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
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1945~1993)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
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
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
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 會議를 契機로 본 亞·太
地域協力の 展開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北韓 核問題와 美·北 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 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立場과 우리의 對中政策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 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9期 第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1993. 12. 31)
-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1994. 3. 31)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論叢〉

-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
(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
(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3)

〈資料〉

-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 93-03 獨逸統一條約 批准法律

韓·러關係 定立方案

—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統一情勢分析 94-10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9252, FAX : 232-5341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 266-0892

印刷日 1994年 5月 日

發行日 1994年 5月 日
